

기고



윤신근 수의사·동물학박사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

맹견과 반려인의 자격

민주정치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되어 있으며 국민은 법에 따라 통치하는 국가 체제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국법에 따라 엄정한 재판을 하여 형을 받은 범죄자들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범죄자를 사면하여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다. 왕권 국가 시대에도 국왕은 새해나 국경일에는 모범수들을 석방해 주었다. 이것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난발하거나 어떤 원칙에 벗어나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며 후회하게 된다.

해마다 국경일이나 연말에는 모범수들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면 대상은 죄를 크게 반성하며 수감생활을 하는 모범수들이며 정치범은 제외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된 후 국민 화합 차원이라면서 전직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사면하여 석방해 주었다. 국민과 역사는 이를 잘한 일이라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나 일각에서는 국민 앞에 반성할 줄 모르는 두 대통령에게 사면해 준 것은 잘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범죄자는 국법에 따라 재판의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형평성이 없는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자는 크게 분류하면 경제사범과 정치 사범으로 분류되는데 경제사범은 민생차원에서 사면에서 우선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 사범은 죄에 따라 정당한 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직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되어 형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부당스러운 일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띄웠던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여론 내부 저항에 부딪히며 사실상 '좌초'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통합' 가치로써 내세운 야심 찬 시도가 '깜짝 우발사건'으

로 끝나자 이 대표가 '실기'한 것이 라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선 경쟁구도와 맞물리며 '이 대표 사퇴 요구론'으로까지 분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면론 이면에는 내년 대선 앞둔 '민주당의 딜레마'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상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교감설이 힘을 얻기도 했지만, 당내에서는 이제 사면론을 넣

어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불이 옮겨붙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실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면론은 '민주당의 딜레마'로 인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이 시점에서 '국민통합'을 꾀한 이유는 결국 '급락하고 있는 여권 지지율' 때문이라는 시각이 다수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과 코로나 19위기에 이어 최근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대변되는 검찰개혁의 '나쁜 결과'가 여권 지지율에 미친 파장은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치'라는 문구로 갈음된다. 이 대표로선 사면론을 통해 '국민통합'과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도층 지지 회복'을 기대했을 수 있다. 예상대로 됐다면 대선 주자로서 그의 존재감도 커졌을 확률이 높다. 당 대표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터라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무릅쓴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교감이나 소통은 부족했고, 결과는 기존 지지층의 반발로 돌아왔다. 통합 파트너 야당으로부터는 오히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노림수"라며 '선거 활용 목적'이라는 역공만 받았다. 무엇보다 중도층 지지를 회복할 방법으로 '사면론'을 선택했다는 것도 패착으로 거론된다. 사면론이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뛰는 여권에는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을 카드로 보였지만,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향후 이 같은 딜레마가 민주당을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통합의 가치는 분명히 필요하고 계속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그 효과를 놓고선 좀 더 세밀한 연구와 당내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현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구속되어 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고 국법에 따른 재판을 하여 형을 받는 정치 사범이다. 이러한 정치 사범을 야당에서 정치 목적으로 구속했다는 것도 온당치 않다. 국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범법자는 재판을 받아 형을 받아야 하며 정치 사범은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ihonam@naver.com FAX: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medical.

새해 달라진 '경찰서비스' 알아둬야

올해부터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보다 낮춰진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시도 경찰청 명칭이 변경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4월 17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km/h 이내,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제한된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지만 앞으로 12만원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야한다. 특히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

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해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9개 특례가 추진된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한다. 기존 '지방경찰청'명칭은 'OO시경찰청' 또는 'OO도경찰청'으로 변경된다. 각 시도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정 등 준비에 착수해 올해 6월 30일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7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Advertisement for Honam Shinmun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